

제1부

언론 관련 판결의 통계적 분석

제1장 분석 범위 및 내용

제2장 일반사항

제3장 소송 결과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제5장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기사삭제 사건

제1장

분석 범위 및 내용

1. 분석 대상

(1) 분석 대상 명예훼손 언론소송의 확정판결은 288건

이 보고서에서는 명예훼손 언론소송 판결의 분석을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급 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에서 총 502건의 판결문을 1차적으로 수집하였다. 이 중 최종 분석대상은,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같은 기간(2022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내에 확정된 판결 가운데, 언론사 또는 언론인을 상대로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침해를 이유로 제기된 민사소송 확정판결에 한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분석대상은 사건 기준 확정판결 288건이다.

분석대상 선정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하였다.

첫째, 법원의 판결이 조정성립으로 마무리된 사건과 소송이 아직 계류 중인 사건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둘째, 언론사와 함께 기고자 또는 제보자가 공동 피고로 포함된 사건의 경우, 언론사 관련 내용만을 추려 분석하였고, 기타 공동 피고(기고자·제보자)에 대한 평가는 제외하였다. 셋째, 심급별로 사건이 취하된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원심 판결 결과를 분석에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보고서는 심급별·기간별로 확정된 언론보도 명예훼손 민사판결만을 선정함으로써 해당 시기 언론 관련 법원의 판단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매체별 분석 대상 총 건수는 419건

확정판결을 기준으로,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매체가 공동 피고로 포함된 경우 각 매체별 보도 내용이나 형식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법원의 인용 여부, 인용 범위, 손해배상청구 및 인용 금액도 매체별로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단일 사건 내 다수의 피고 매체가 포함된 경우, 각 매체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이 통계분석 목적에 따라 소송 사건을 피고 매체 수에 따라 분할하여 집계한 결과, 확정판결 기준으로 매체별 분석 대상 건수는 총 419건이다.

2. 자료수집 방법

언론관련판결 분석보고서 작성에 앞서, 판결문 수집과 확정여부 확인을 위해 일산 법원도서관 특별창구, 법원 대국민서비스 인터넷 시스템, 케이스노트 프로 등 여러 경로를 적극 활용하였으며, 뉴스 기사와 ‘나의 사건 검색’시스템을 통한 이중 확인을 거쳐 데이터의 완결성을 확보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 판결문의 수집, 확정여부 확인, 데이터 검토 절차이다.

(1) 판결문 수집

먼저, 일산 법원도서관에 설치된 ‘판결문 검색·열람 특별창구’를 활용하여 수집을 시작하였다. 이 특별창구는 법원에서 선고된 각종 판결문을 체계적으로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으로, 해당 창구를 통해 분석 대상으로 삼을 판결문의 법원명과 사건번호 등 핵심 정보를 파악하였다. 현장에서 다양한 사건의 정보와 목록을 직접 확인하면서, 필요한 판결문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마련하였다.

그 다음에는 법원에서 국민에게 제공하는 판결문 인터넷 열람 시스템과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법원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사전 확인한 사건번호와 법원명 등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판결서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판결서 사본을 유료로 구매하여 확보할 수 있다.

아울러, 국내 최대 규모의 법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 중인 케이스노트 프로(CaseNote Pro) 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였다. 해당 플랫폼은 법원에서 공개한 판결문뿐 아니라, 다양한 기초자료 및 관련 논평 등도 함께 제공하므로, 누락된 판결문이나 추가적인 사건정보를 보완적으로 수집하는 데 매우 유용했다.

참고로, 다양한 경로들을 통해 분석 대상 기간 중 판결문을 최대한 수집하려 노력하였으나, 동 기간 법원에 의해 생산된 판결문 전수를 대상으로 분석한 것은 아니다.

(2) 판결 확정 여부 확인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집된 판결문이 ‘확정판결’인지 여부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판결문이나 사건에 관련된 뉴스를 인터넷에서 검색하고, 그 기사 내용에서 사건의 당사자인 원고 및 피고, 사건의 진행경과, 판결 확정 여부 등이 언급된 점을 확인하였다. 뉴스기사는 사건의 사회적 파장과 판결 이후의 진행상황을 비교적 신속하고 상세하게 보도하므로, 판결 확정여부를 파악하는 1차 자료로 활용된다.

이후 해당 뉴스 기사에서 언급된 사건번호, 원고·피고, 사건명 등의 정보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운영하는 '나의 사건 검색' 시스템을 직접 이용하였다. 이 시스템에서는 원고 또는 피고,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사건의 진행 현황과 판결의 확정 여부(예: 항소, 상고 여부 등)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모든 판결문에 대한 확정여부를 최종적으로 검증하였다.

(3) 데이터 검토 절차

위의 절차로 수집 및 확정여부가 확인된 판결문은 사건번호, 당사자, 판결 선고일자, 판결 요지 등 주요 정보를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데이터는 중복 여부, 정보 누락, 오류 등을 추가적으로 점검하여, 최종적으로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3. 분석 내용

본 보고서의 제1부에서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예훼손 언론소송(확정판결 기준)의 통계적 분석(일반사항, 소송 결과) 내용을 담고 있다. 다양한 항목별로 세분화된 분석을 통해, 명예훼손 언론소송의 현황과 쟁점 및 손해배상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명예훼손 언론소송에 대한 통계적 분석의 항목별 구체적인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항

- 심급별 확정판결 건수, 청구유형별 확정판결 건수, 원고 유형별(대표 원고, 공적 인물 등) 확정판결 건수, 매체별 분류, 매체별 피고구성, 보도유형별 현황

(2) 소송 결과

- 최종 소송 결과, 원고의 원심판결 유지 여부, 청구유형별 소송 결과, 원고 유형별 소송 결과,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3) 손해배상청구 사건

-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결과, 손해배상 청구액 및 인용액, 인용액의 분포, 원고유형별 승소율과 인용액, 매체유형별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언론인 승소 여부, 손해배상청구 인용 및 기각 사유

(4) 정정·반론·추후보도청구, 기사삭제청구 사건

- 각 청구유형별(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기사삭제) 소송 결과, 정정보도청구 및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4. 통계분석을 위한 코딩 항목 및 코딩 방법

(1) 코딩 항목

〈표 1〉 코딩 항목

구분	코딩 항목	
일반사항	01. 판결번호	02. 선고일자
	03. 법원명	04. 심급
	05. 청구의 종류	06. 청구원인 침해유형
원고	07. 대표 원고 분류	08. 공적인물 분류
피고	09. 사건 피고 구성	10. 매체별 피고 구성
	11. 피고 언론인 개인 승소 여부	
매체 분류	12. 매체별 분류	
보도내용 분류	13. 방송 외 기사 유형	14. 방송프로그램 유형
청구별 처리결과	15. 청구별 처리결과	
	15-1. 정정보도	15-2. 반론보도
	15-3. 추후보도	15-4. 기사삭제
	15-5. 손해배상	
판결 결과	16. 최종결과	17. 확정여부
	18. 심급별(1심, 2심, 3심) 결과	19. 원고 기준 원심유지 여부
손해배상	20. 사건 청구액	21. 사건 인용액
	22. 매체별 청구액	23. 매체별 인용액
	24. 손해배상 인용사유	25. 손해배상 기각사유
정정보도	26. 정정 기각사유	27. 정정 각하사유
반론보도	28. 반론 기각사유	29. 반론 각하사유

(2) 코딩 방법

수집된 판결을 코딩하는 과정에서 개념이 모호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존 판결분석보고서의 분석 방법을 기본 원칙으로 삼되,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분류 기준을 추가로 마련하여 적용하였다.

1) 대표 원고 분류 기준

- ① 다수의 원고가 함께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개인과 단체가 모두 청구인으로 포함된 경우에는 대표 원고를 '단체'로 분류하였다.
- ② 판결에서 공적 인물이라고 직접 언급하거나 암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판례나 학설에서 꾸준히 공인으로 분류한 인물은 공적 인물 범주에 포함시켰다.
- ③ '공적 인물'의 범위에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전문가, 유명 언론인, 유명 기업인, 유명 연예인 등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거나 단체의 대표자로서 공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때 고위 공직자는 판결문에 명확히 기재된 경우와 「공직자윤리법」 제3조¹⁾에서 정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은 '고위 공직자'가 아닌 '정치인'으로 구분하였다.
- ④ 공적 인물 여부는 원고가 소송 당시 현직이 아닌 전직이더라도, 그 재직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쟁점인 경우 포함하였다. 즉, 임기만료, 사직, 해임 등으로 이미 직위를 상실한 경우라도 해당 사건 당시의 지위를 반영하였다.
- ⑤ 일반인과 공적 인물이 공동으로 원고에 있는 경우에는 대표 원고를 '공적 인물'로 분류하였다.

2) 매체명 분류 기준

- ① 오프라인 매체(예: 신문, 잡지 등)와 별도로, 동일 언론사의 온라인 매체(언론사닷컴)을 대상으로 청구가 제기된 경우나 오프라인과 온라인 기사 모두에 의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오프라인 매체와 온라인 매체(닷컴)를 각각 독립된 매체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예) 사건의 피고가 (주)A신문사 한 곳이지만, 청구취지에서 'A신문'과 'A신문 홈페이지' 각각에 대해 정정보도 등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를 두 개의 개별 매체로 나누어 코딩·분석함
- ② 피고가 언론인 개인일 경우에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언론사(매체)를 기준으로 코딩하였다. 즉, 개인 언론인이 피고인 사건도 최종적으로는 해당 언론사의 매체명으로 분류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1) 공직자윤리법 제3조는 공직자를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등 주요 정무직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준하는 별정직·외무·정보·경호공무원, 법관·검사, 군·경·소방 고위직, 대학 등 각급 학교의 주요 간부, 일정 규모 이상의 임기제공무원, 공기업·금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등 사회 각 분야의 고위공직자로 규정한다.

3) 매체별 피고 분류 기준

- ① 소송에 포함된 언론인 피고를 직위별로 '대표', '국장', '부장', '담당' 등으로 세분화하여 파악하였다.
- ② 피고가 대표이사, 편집국장, 보도본부장 등 고위직이라 하더라도 해당 언론인이 보도 기사를 직접 작성한 경우, '담당'으로 분류하였다.

4) 언론인 개인에 대한 판결 결과 처리 기준

언론인에는 언론사 대표, 기자, 프로듀서 등 언론사에 소속된 인물만을 포함하였으며, 외주 제작사 직원 등 언론사 소속이 아니거나 보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인물은 제외하였다. 언론인 개인은 정정보도 등 보도 게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항목은 언론인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에 한해 별도로 코딩·분석하였다.

5) 청구별 소송 결과 처리 원칙

- ① '원고 승소' 및 '원고 승소율'에는 원고 일부승소 사건(예: 손해배상액·정정보도문 등이 청구보다 감액·감축된 경우, 정정보도는 인용되고 손해배상은 기각된 경우 등)을 모두 포함하였다.
- ② 2심에서 항소가 기각되거나 원심판결이 일부 변경 또는 취소되는 때, 그리고 3심에서 상고기각·원심파기 등이 있는 경우에도, 판결의 실질적 취지가 원고의 청구를 일부라도 인정한 경우 '원고 승소'로, 전부 기각된 경우 '원고 패소'로 분류하였다.

6) 원고 원심판결 유지 여부

2심 판결 시의 '원심'은 1심 판결을, 3심(상고심) 판결 시의 '원심'은 2심 판결을 말한다. 상급심이 하급심과 동일하게 원고 청구를 인용한 경우는 '원심유지(승유지)'로, 하급심과 달리 원고 청구를 기각한 경우는 '원심변복(승변복)' 등으로 구분하여 코딩하였다.

7) 매체별 청구액 및 인용액 산정 방법

- ① 피고가 복수일 경우, 청구취지액 및 인용액은 매체별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 ② 복수의 매체가 연대하여 배상을 청구 또는 인용받은 경우, 동일한 금액을 각 매체별로 각각 집계하였다.
예) 'A신문사와 B신문사가 연대하여 1억 원을 배상'이라면, A신문사·B신문사 각각의 청구액에 1억 원을 기재
- ③ 지면 신문과 인터넷(언론사닷컴) 등 한 언론사의 두 매체에 동시 청구·인용된 경우, 해당 청구액 및 인용액을 각 매체별로 균등하게 분할해(예: 절반씩) 집계하였다.
예) 한 언론사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각 지면 및 홈페이지에 모두 요구한 경우, 각 매체에 손해배상금액의 1/2씩 기재

- ④ 언론인 개인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이 청구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언론사 소속 매체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에 합산하여 기록하였다. 단,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연대 배상 청구가 있으면 언론사에 대한 청구액 및 인용액만 기재하였다.

예) 'A신문사와 담당기자가 연대해 1억 원을 배상'이라면, 1억 원을 기재

- ⑤ 상소심 판결문에 청구취지액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심의 청구취지액을 기재하되, 상소과정에서 청구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금액을 반영하였다.

제2장 일반사항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확정된 명예훼손 언론소송 288건(사건 단위)을 선정하였으며, 이들 사건의 심급별 판결문을 모두 집계한 결과 총 502건의 판결문이 확인되었다. 또한, 확정된 판결의 각 심급에서 피고가 된 언론매체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전체 매체별 집계는 722건에 달하며, 이 중 실제 확정판결 기준에 따라 매체별로 분리·선정된 419건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단일 사건 또는 판결에서 복수의 매체가 피고로 지정되는 경우, 각 매체를 개별적 분석단위로 분리하여 통계적 분석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데이터셋(사건 단위 288건, 판결문 단위 502건, 매체 단위 419건)을 토대로 심급별 확정판결 건수, 청구유형별 현황, 원고유형별 분포, 매체유형별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일 사건이라도 심급과 매체에 따라 달라지는 판결 결과와 쟁점을 반영함으로써, 명예훼손 언론소송 판결의 경향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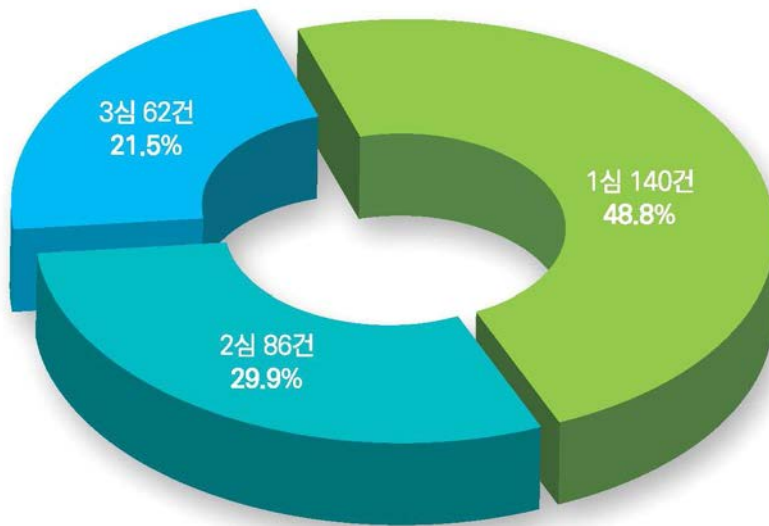
1. 심급별 확정판결 건수

1심 48.6%, 2심 29.9%, 3심 21.5%

심급별 확정판결 건수는 '최종 확정심급' 기준으로 집계하였다. 즉, 한 사건이 1심에서 확정되면 1심에, 2심까지 진행된 후 확정되면 2심에, 3심(상고심)까지 올라가 확정되면 3심에 각각 1건씩만 반영하였다.

총 288건의 확정판결 중 140건(48.6%)이 1심에서 확정되었고, 86건(29.9%)(환송후심 1건 포함)은 2심에서, 62건(21.5%)은 3심에서 확정되었다. 전체 사건의 약 51.4%(148/288건)는 1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2심 또는 3심까지 진행되었으며, 이는 명예훼손 언론소송의 절반 이상이 상급심까지 이어져 불복률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1심 확정 사건은 주로 사실관계가 명확하거나 쟁점이 단순한 경우에 해당하며, 2·3심 확정 사건은 사회적 이슈나 법리 해석이 쟁점이 되어 항소·상고 등 심급이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표 2-1〉 심급별 건수



2. 청구유형별 확정판결 건수

원고가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법은 손해배상 > 정정보도/손해배상 순

288건의 확정된 명예훼손 언론소송을 청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표 2-2>와 같이 원고는 주로 손해배상, 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삭제 등 다양한 피해구제 방법을 청구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손해배상 단독 청구가 가장 많음

전체 288건 중 손해배상만을 단독으로 청구한 사례가 112건(38.9%)에 달해, 피해구제 수단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다. 이는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 금전적 배상이 가장 선호되는 피해구제 방법임을 보여준다.

(2)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동시 청구가 두 번째로 높음

정정보도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청구한 사례는 73건(25.3%)으로, 전체 중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원고는 언론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침해에 대한 온전한 명예회복을 위해 정정보도청구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손해배상·정정보도 외 복합 청구 다수

‘손해배상/기사삭제’ 22건(7.6%),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20건(6.9%), ‘정정보도/반론보도’ 13건(4.5%), ‘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12건(4.2%) 등 복합청구가 빈번하게 나타났으며, 이처럼 여러 유형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복합청구의 비율이 전체의 약 40%를 상회한다.

반면 반론보도, 기사삭제, 추후보도 등만을 단독 또는 추가로 청구한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결론적으로,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 원고는 주로 손해배상청구(단독 및 복합 포함)에 집중하며, 상당수는 정정보도 등 복수의 구제수단을 함께 청구함으로써, 금전적 배상과 실질적 명예회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2〉 청구유형별 확정판결 건수

청구명	건수	비율(%)
손해배상	112	38.9
정정보도/손해배상	73	25.3
손해배상/기사삭제	22	7.6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20	6.9
정정보도	15	5.2
정정보도/반론보도	13	4.5
반론보도	12	4.2
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12	4.2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3	1.0
추후보도/손해배상	2	0.7
기사삭제	1	0.3
반론보도/손해배상	1	0.3
손해배상/기사삭제/기타	1	0.3
손해배상/기타	1	0.3
합 계	288	100.0

〈표 2-3〉에서는 2022~2024년 명예훼손 언론소송 판결 288건을 대상으로, 피해구제 청구방식을 청구권별로 중복집계하여 분석하였다. 중복집계란, 한 사건에서 손해배상·정정보도·기사삭제 등 복수의 구제수단이 함께 청구된 경우, 이를 각각의 청구유형별로 분리하여 모두 합산 집계하는 방식²⁾을 말한다. 즉, 사건 건수와 무관하게 실제로 법원에 요청된 전체 청구권의 빈도와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전체 청구권 473건 중 손해배상청구가 247건(52.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손해배상이 단독으로 청구되기도 하지만, 다른 청구(정정보도, 반론보도, 기사삭제 등)와 병합되어 함께 신청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원고들은 명예훼손 피해에 대해 금전적 보상을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정정보도청구는 136건(28.8%)으로 두 번째로 빈번했다. 다수 사건에서 손해배상과 병합하거나, 반론보도 등과 동시에 청구되는 사례가 많았다. 이는 원고가 단순한 금전적 배상 외에도 사실관계의 바로잡기와 명예회복을 적극적으로 원함을 의미한다. 더불어, 반론보도청구(49건, 10.4%)와 기사삭제

2) 한 사건에서 손해배상, 정정보도, 기사삭제 등을 동시에 청구했다면 사건 건수는 1건이지만, 청구권별로 따로 세면, 예를 들어 1건을 손해배상 1 + 정정보도 1 + 기사삭제 1 = 3건으로 집계한 것을 의미한다.

청구(39건, 8.2%)도 주요 피해구제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추후보도청구(2건, 0.4%) 등 기타 구제 수단도 함께 집계되었다.

이러한 중복집계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소송의 실질적인 권리구제 요구 총량과 개별 청구유형의 실제 선호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단순 사건수 집계와 달리, 다수 사건에서 복수의 청구권 병합이 이루어지므로, 실제 현장에서 손해배상 등 핵심 구제수단의 선택 빈도가 더욱 높게 나타난다. 결국, 원고들은 단일 구제 수단이 아니라 금전적 배상(손해배상)과 명예회복(정정보도 등) 등 다양한 청구권을 병합하여 제소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는 우리 사회의 권리의식이 확대되고, 복합적인 피해구제 요구가 언론분쟁 실무에서 보편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3〉 청구유형별 중복집계 건수(각 청구권별 합산)

청구명	건수	비율(%)
손해배상	247	52.2
정정보도	136	28.8
반론보도	49	10.4
기사삭제	39	8.2
추후보도	2	0.4
합 계	473	100.0

3. 원고유형별 현황

언론소송을 가장 많이 제기한 원고유형은 일반인

2022~2024년 명예훼손 언론소송 확정판결 288건을 분석한 결과, 원고의 유형은 크게 ‘개인’과 ‘단체’로 구분된다. 전체 사건 중 개인이 제기한 소송은 170건(59.0%), 단체 소송은 118건(41.0%)이다. 이는 과거와 달리 언론 피해구제 소송이 일부 공적 인물이나 법인 등 단체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 등 사회 각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 원고 중에서는 ‘일반인’이 113건(개인의 66.5%, 전체 사건의 약 40%)으로 가장 많았고, ‘공적 인물’(57건, 개인의 33.5%)이 뒤를 이었다. 공적 인물 중에서는 정치인(25건, 공적인물의 43.9%), 고위공직자(18건, 공적인물의 31.6%), 기타 유명인·언론인 등이 포함되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가 소송 쟁점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체 원고를 세분화하면, 기업이 45건(단체의 38.1%, 전체의 15.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도 일반단체(20건), 종교단체(14건),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시민단체 등이 고르게 분포하였다.

〈표 2-4〉 원고유형별 확정판결 건수

원고유형		건수	비율(%)
개인	일반인	113	39.2
	공적인물	57	19.8
	소 계	170	59.0
단체	기업체	45	15.6
	기타 일반단체	20	6.9
	종교단체	14	4.9
	공공단체	9	3.1
	지방자치단체	9	3.1
	언론사	8	2.8
	국가기관	7	2.4
	교육기관	3	1.0
	시민단체	3	1.0
	소 계	118	41.0
합 계		288	100.0

〈표 2-5〉 공적인물 유형별 확정판결 건수

공적인물 유형	건수	비율(%)
정치인	25	43.9
고위공직자	18	31.6
기타 유명인	6	10.5
유명 언론인	4	7.0
유명 연예인	2	3.5
유명 기업인	1	1.8
유명 예술·체육인	1	1.8
합 계	57	100.0

4. 매체유형별 현황

인터넷신문³⁾에 대한 소송이 전체 매체 중 가장 높은 비중 차지

〈표 2-6〉에 따르면, 명예훼손 언론소송 확정판결 288건을 매체별로 분류한 결과, 총 419건 중 인터넷신문이 240건(57.3%)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최근 언론분쟁의 중심이 빠르게 온라인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문은 79건(18.9%), 방송은 76건(18.1%)으로 각각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 신문·방송 등 전통 미디어도 여전히 언론 관련 소송에서 중요한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잡지(6건, 1.4%)와 뉴스통신(4건, 1.0%)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지만, 언론 관련 소송이 다양한 매체유형에 걸쳐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14건, 3.3%)는 언론사명 또는 매체유형이 불분명한 사례를 포함한다.

〈표 2-6〉 매체유형별 현황

매체유형	건수	비율(%)
인터넷신문	240	57.3
신문	79	18.9
방송	76	18.1
잡지	6	1.4
뉴스통신	4	1.0
기타 ⁴⁾	14	3.3
합 계	419	100.0

3) 언론보도를 직접 생산하거나 직접 생산한 보도를 자사 또는 계열사 홈페이지에 제공 또는 매개하는 '독립형 인터넷신문'과 '언론사닷컴'을 '인터넷신문'으로 분류하였다.

4) 기타는 기타와 불명을 모두 포함한다(기타 0건, 불명 14건).

5. 보도유형별 분류

매체유형별 확정판결을 보도유형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419건 중 '방송 외' 매체가 337건(80.4%)을 차지했고, '방송'은 82건(19.6%)이었다.

'방송 외' 337건에서 스트레이트 기사가 325건(96.4%)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는 명예훼손 언론소송이 주로 사실 전달에 집중된 보도 기사에서 발생함을 의미한다. 반면, 해설이나 논평 사설, 칼럼 등은 6건(1.8%)에 그쳤고, 기타 유형도 6건(1.8%)으로 매우 드물게 나타났다. 즉, 논평이나 해설 기사보다는 단순 사실 전달 기사가 명예훼손 분쟁의 주요 원인임을 알 수 있다.

'방송' 82건 중에서는 뉴스 프로그램이 57건(69.5%)으로 가장 많았고, 탐사·시사고발 프로그램이 19건(23.2%)으로 뒤를 이었다. 교양 프로그램과 기타 유형은 각 4건(4.9%), 2건(2.4%)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이었다. 이는 방송 분야에서는 주로 메인 뉴스와 시사·고발 보도 프로그램에서 명예훼손 소송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결국, 명예훼손 언론소송은 신문·인터넷 등에서는 단순 사실 전달 기사(스트레이트)에, 방송에서는 뉴스와 탐사·고발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이슈나 논란이 실시간 뉴스와 주요 보도를 통해 신속하게 확산될 때 명예훼손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보여준다.

〈표 2-7〉 보도유형별 소송빈도

보도유형		건수	비율(%)
방송외	스트레이트	325	96.4
	스트레이트/사설	3	0.9
	칼럼	3	0.9
	기타*	6	1.8
	소 계	337	100.0
방송	뉴스	57	69.5
	고발	19	23.2
	교양	4	4.9
	기타*	2	2.4
	소 계	82	100.0

* 기타: 기타+불명

※ 방송 다시보기가 별도 가공 없이 그대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될 경우 방송 보도로 간주함

6. 피고 분류

피고, 언론사 단독이 절반 이상

조직 책임이 중심이지만 공동·개별·복합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

2022~2024년 명예훼손 언론소송(매체별 확정판결 기준)을 피고구성별로 분류한 결과, 피고는 크게 ‘언론사 단독’, ‘언론사/담당 공동’, ‘담당 단독’, ‘대표 또는 편집책임자’, 그리고 ‘복합구성(여러 직위 혼합)’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다. 담당자는 기자, PD, 작가 등 2명 이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피고 구성별 분석 결과, 언론사 단독 피소가 전체의 50.4%로 가장 많았고, 언론사와 담당자(26.7%), 담당자 단독(6.0%) 등의 순이었다.

(1) 언론사 단독 피고(조직 책임 중심)

전체 419건 중 언론사 단독이 211건(50.4%)으로 명예훼손 언론소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소송에서 원고가 언론사라는 조직에 책임을 묻는 경향이 가장 강하며, 조직적·법인책임이 소송의 주요 쟁점을 의미한다. 언론사의 구조적 보도 시스템, 경영진의 판단 및 편집 정책 등이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언론사와 담당자 공동 피고(집단·개별 책임 병행)

언론사와 담당자(기자, PD 등)가 함께 피고로 지정된 건이 112건(26.7%)에 달했다. 이 경우, 조직과 해당 보도 작성자 모두에게 책임을 묻는 것으로, 분쟁 발생 시 보도의 최종 결정권자와 실제 작성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려는 원고의 취지를 반영한다. 전체 소송 중 약 4분의 1 이상이 조직과 개인의 ‘공동책임’ 체계로 진행되는 셈이다.

(3) 담당자 단독(개별 책임 강조)

담당자 단독을 피고로 삼은 사례는 25건(6.0%) 있었다. 실제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방송 제작자 등 개별 인물에 책임을 묻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법적으로 특정 개인의 역할과 의사결정, 작성 과정의 과실이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중요한 구성이 된다.

(4) 대표·편집 책임자 단독 및 복합(경영진·최종결재자 책임)

발행인이나 대표이사 등 언론사의 최고경영자가 직접 피고가 되는 경우는, 조직 운영과 편집정책 결정권자의 법적 관리 책임을 강조하는 사건에서 자주 등장한다. 또한 대표, 편집 책임자, 담당자 등 다양한 직위가 동시에 피고로 포함된 복합 사건도 존재한다.

(5) 기타

실제 소송에서 다양한 직책(대표, 편집책임자, 담당 등)을 동시에 지정하거나, 외부 필자·제보자·라디오 진행자 등 비(非)언론사 구성원까지 특이하게 피고로 포함시키는 사례도 관찰됐다.

〈표 2-8〉 언론소송 피고 구성

언론소송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	211	50.4
언론사/담당	112	26.7
담당	25	6.0
대표	13	3.1
언론사/대표/담당	11	2.6
언론사/대표	10	2.4
대표/담당	6	1.4
언론사/편집국장/담당	6	1.4
언론사/대표/편집국장/담당	4	1.0
언론사/담당/비언론	3	0.7
담당/비언론	2	0.5
언론사/담당/기타	2	0.5
언론사/대표/담당/비언론	2	0.5
편집국장	2	0.5
편집국장/부장/담당	2	0.5
대표/편집국장	1	0.2
대표/편집국장/담당	1	0.2
비언론	1	0.2
언론사/대표/비언론	1	0.2
언론사/대표/편집국장/부장/담당	1	0.2

언론소송 피고 구성	건수	비율(%)
언론사/비언론	1	0.2
언론사/편집국장	1	0.2
언론사/편집위원(장)	1	0.2
합 계	419	100.0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 피고는 주로 언론사에 집중되지만, 기자·PD 등 개별 책임자에 대한 소송도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보도 과정의 다양한 인적 요소에 대한 책임 소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언론사와 담당자를 공동 피고로 지정하는 사례가 많아, 보도 과정의 투명성, 내부 기록관리, 책임 분산이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대표, 편집책임자 등 복수의 직위가 함께 피고가 되는 복합 소송도 늘어나며, 법적·윤리적 책임 구조가 복잡해지고 있다.

제3장

소송 결과

이 장에서는 2022~2024년 신고·확정된 명예훼손 언론소송 288건을 대상으로, 심급별 소송결과 뿐만 아니라 청구별·원고유형별·매체유형별로 분류하여 원고 승소율을 분석했다.

1. 심급별 최종 소송 결과

(1) 심급별 소송 결과

2022~2024년 확정된 명예훼손 언론소송 288건(사건 기준)을 심급별로 분석한 결과는 <표 3-1>과 같다.

<표 3-1> 심급별 소송 결과

심급	원고승	원고패	총건수	원고 승소율(%)
1심	43	97	140	30.7
2심	36	50	86	41.9
3심	30	32	62	48.4
합 계	109	179	288	37.8

1심에서 확정된 140건 가운데 원고 승소가 43건으로, 승소율은 30.7%를 기록했다. 2심에서는 총 86건 중 원고가 승소한 건수가 36건으로, 승소율은 41.9%로 상승하였다. 3심은 전체 62건 중 원고 승소가 30건으로, 승소율은 48.4%에 이르렀다. 즉, 전체 판결 기준으로 원고가 승소한 경우는 109건이며, 전체 승소율은 37.8%이다.

심급별로 살펴보면, 상급심으로 올라갈수록 원고의 승소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1심에서 약 30%에 머물던 승소율은 2심에서 12%p 가까이 높아졌고, 3심에서는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상승하였다.

(2) 연도별 심급별 승소율

〈표 3-2〉 연도별 심급별 승소율

심급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1심	30.2	30.4	31.7
2심	29.2	45.7	48.1
3심	62.5	41.7	45.5
전체 원고 승소율	35.5	38.1	40.0

〈표 3-2〉에 따르면, 2022~2024년 명예훼손 언론소송의 연도별 승소율은 심급이 올라갈수록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1심 승소율은 매년 30~31%대에서 큰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나, 2심 승소율은 2022년 29.2%에서 2023년 45.7%, 2024년 48.1%로 크게 상승했다. 3심 승소율은 2022년 62.5%로 일시적으로 높았다가 2023~2024년에는 40%대에서 안정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전체 승소율은 2022년 35.5%, 2023년 38.1%, 2024년 40.0%이다.

2. 원고의 원심 판결 유지 여부

상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57.4% 반복

〈표 3-3〉에 따르면, 2022~2024년 명예훼손 언론소송의 상소심(2·3심) 판결 148건 중, 원심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경우는 62건(41.9%)으로 절반 이하의 비율을 보였다. 반면, 85건(57.4%)은 상소심에서 원심과 결론이 달라지는 번복이 발생했으며, 번복된 85건 중 78건(91.8%)은 원심에서 패소했던 피고가 상소 후 승소로 판결이 뒤집힌 사례였다. 이에 비해 원고가 원심에서 패소했으나 상급심에서 승소로 반복된 사례는 7건(4.7%)로 매우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명예훼손 언론소송 사건에서 상소심의 법리 혹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원심과 크게 달라질 수 있고, 사건별 사실관계와 쟁점에 따라 상소를 통해 판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2·3심의 법리 및 사실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드러난다.

〈표 3-3〉 상소심의 원심 판결 유지여부

구분	건수	원심판결 유지		원심판결 번복		파기환송심
		원고승소판결 유지	원고패소판결 유지	원고승소판결 번복	원고패소판결 번복	
2심	86 (100.0)	29 (33.7)	2 (2.3)	47 (54.7)	7 (8.1)	1 (1.2)
3심	62 (100.0)	30 (48.4)	1 (1.6)	31 (50.0)	.	.
합 계	148 (100.0)	59 (39.9)	3 (2.0)	78 (52.7)	7 (4.7)	
		62 (41.9)		85 (57.4)		1 (0.7)

※ ()안의 숫자는 %

3. 청구별 소송 결과

손해배상이 가장 많이 청구되나 전체 승소율은 31.3%

〈표 3-4〉는 288건의 명예훼손 언론소송 확정판결을 청구권별로 중복집계하여, 총 473건의 청구 결과를 분석한 통계이다. 전체 청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손해배상청구로, 247건(52.2%)을 기록했다. 이어 정정보도청구가 136건(28.8%), 반론보도청구 49건(10.4%), 기사삭제청구 39건(8.2%), 추후보도청구 2건(0.4%)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추후보도청구는 모두 인용되어 원고 승소율이 100%였으나, 사례 수가 적어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주요 청구의 원고 승소율은 반론보도가 40.8%로 가장 높고 손해배상 32.0%, 정정보도 27.2%, 기사삭제 25.6%으로, 통상적으로 원고의 전체 청구 중 약 1/4~1/3만 인용되는 경향을 보였다. 전체 승소율은 31.3%로, 언론소송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확률은 3건 중 1건 정도임을 의미한다.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청구 빈도는 압도적으로 높지만 승소율은 평균에 근접(32.0%)해, 단일 소송에서의 실현 가능성에는 제한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정보도와 기사삭제는 인용률이 각각 27.2%, 25.6%로, 명예 회복 목적의 청구가 실제로 법원에서 인용되는 비율이 낮음을 시사(판결문상 허위 또는 침해 정도 판정이 엄격함)한다. 반론보도는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정보도 대비 선택적 측면에서 원고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합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청구 중 68.3%가 기각되었고 31.3%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청구별 소송 결과

청구구분	총 건수	인용	기각	각하	기각 및 각하	원고 승소율(%)
정정보도	136	37	97	1	1	27.2
반론보도	49	20	29			40.8
추후보도	2	2				100.0
기사삭제	39	10	29			25.6
손해배상	247	79	168			32.0
합 계	473	148	323	1	1	31.3

4. 원고유형별 소송 결과

개인 원고(특히 일반인)와 공공단체의 승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공적 인물별 승소율은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 원고가 개인인 경우, 일반인이 66.5%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승소율도 공적 인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5〉 참조). 공적 인물의 승소율이 낮은 것은 사법부가 공적 인물에 대한 수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두는 경향과 연결된다. 단체가 원고인 판결 중에서는 국가기관(71.4%)과 공공단체(66.7%)의 승소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언론사·교육기관·시민단체는 승소 사례가 없었다. 종교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승소율은 각각 21.4%, 33.3%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38.8%)과 단체(36.4%)가 원고인 사건의 승소율은 각각 약 3~4건 중 1건에 해당하며, 이는 2023년 전체 민사사건의 원고 승소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5)

〈표 3-5〉 원고유형별 소송 결과

원고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원고 승소율(%)
개인	일반인	113	45	68	39.8
	공적 인물	57	21	36	36.8
	소 계	170	66	104	38.8
단체	기업	45	18	27	40.0
	기타 일반단체	20	8	12	40.0
	종교단체	14	3	11	21.4
	공공단체	9	6	3	66.7
	언론사	8	.	8	.
	교육기관	3	.	3	.
	국가기관	7	5	2	71.4
	지방자치단체	9	3	6	33.3
	시민단체	3	.	3	.
	소 계	118	43	75	36.4
합 계		288	109	179	37.8

5) 법원행정처, 『2024 사법연감』, 818면 참조. 민사본안사건의 심급별 처리결과에 따르면, 단독사건(소액사건 포함)의 1심 원고 승소율(일부 승소 포함)은 55.8%로 집계되었으며, 합의사건의 1심 원고 승소율은 41.6%로 나타났다.

〈표 3-6〉 공적 인물 유형별 원고 승소율

공적 인물 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원고 승소율(%)
정치인	25	6	19	24.0
고위공직자	18	11	7	61.1
유명 언론인	4	2	2	50.0
유명 기업인	1	-	1	-
유명 연예인	2	-	2	-
유명 예술·체육인	1	-	1	-
기타 유명인	6	2	4	33.3
합 계	57	21	36	36.8

〈표 3-6〉에 따르면, 공적 인물 유형별 원고 승소율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다. 정치인은 가장 많은 사건 수(25건)를 기록하지만 승소율은 24%에 그쳐, 정치인이 청구한 소송에 대해 법원은 언론의 비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위공직자는 18건 중 11건(승소율 61.1%)이 인용되어 허위사실이나 신상 침해에 대해 더욱 엄격히 판단하는 경향이 드러난다.

유명 언론인은 사건 4건 중 2건에서 승소해 승소율이 50%였다. 반면, 유명 기업인(1건), 유명 연예인(2건), 유명 예술·체육인(1건)은 모두 패소해 승소율이 0%였고, 기타 유명인은 승소율이 33.3%였다. 구체적으로 유력 언론사 사주와 유명 언론인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했고, 유명 목사에 대한 소송은 원고가 패소했다.

전체 공적 인물 유형의 승소율은 36.8%로 집계되었다. 이 중 정치인의 승소율이 가장 낮았으며, 언론인과 기타 유명인 등 대중에 노출되는 집단의 승소율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사례 수가 적어 이러한 결과를 전체적인 경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5.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인터넷신문에서 명예훼손 언론소송이 가장 빈번하고 승소율도 평균보다 높아

(1) 인터넷신문

인터넷신문의 사건수(240건)는 다른 매체 유형에 비해 많으며, 전체의 57%에 달한다. 승소율은 43.3%로 전체 평균(38.2%)보다 높다. 그 배경에는 정보유통의 신속성 및 광범위성, 사실 검증 부족, 익명성 등 인터넷 언론이 가진 구조적 위험성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

(2) 신문

신문은 사건 수(79건)로 매체유형 중 두 번째로 많으나, 승소율은 25.3%로 다른 매체유형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한다. 법원은 전통매체인 신문이 타 매체에 비해 승소율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신문의 경우 취재·편집 과정에서 '데스킹'이 보다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공적 관심사와 관련하여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방송

방송 역시 상당한 사건 수(76건)가 집계되었으나, 승소율(23.7%)은 전체 매체 중 가장 낮은 편이다. 방송의 공적 성격, 사회적 영향력, 표현의 자유가 법원에서 더 강하게 인정되면서, 원고가 실제로 법적 구제를 받기는 더 어렵다. 방송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데스킹 절차, 법적 분쟁 가능성이 있는 내용에 대한 사전 법률 검토 등이 이루어진다. 또한, 공익적 목적 수행이라는 사회적 책무와 그에 따른 비판·규제의 영향으로 방송 내용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4) 잡지·뉴스통신

두 매체 모두 사례 수(잡지 6건, 뉴스통신 4건)가 적은 소수 표본이다. 승소율(각각 50%)은 높게 나타나지만, 표본의 제한 때문에 통계적으로 전체 경향을 대표하기는 어렵다. 실제 사건별로 특수성이 강할 수 있고, 사안별 판단이 승소율을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

〈표 3-7〉 매체유형별 소송 결과

매체유형	사건수	원고 승소	원고 패소	승소율(%)
인터넷신문	240	104	136	43.3
신 문	79	20	59	25.3
방 송	76	18	58	23.7
잡 지	6	3	3	50.0
뉴스통신	4	2	2	50.0
불 명	14	13	1	92.9
합 계	419	160	259	38.2

인터넷신문의 소송 빈도와 승소율이 모두 높아 분쟁의 중심축이 온라인 매체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명예훼손 언론소송의 원고 승소율은 40% 미만에 그쳐, 실질적 권리구제의 장벽이 높은 현실이 자료로 확인된다.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 방식은 손해배상청구이다. 손해배상은 불법행위를 전제로 성립하는 청구권으로서 법적 성격이 명확하다.

이에 위원회는 청구권별로 분류된 사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만을 별도로 추출하여 다음 항목을 분석했다.

〈표 4〉 손해배상청구 사건 세부 통계 분석항목

구분	내용
원고 승소율	전체 손해배상청구 사건 중 원고 승소(일부/전부) 사건 비율
청구액	사건 전체 청구액 합산, 평균값, 중앙값 ⁶⁾ , 최빈값 ⁷⁾
인용액 및 인용액 분포	승소 사건의 인용액에 대해 평균값, 중앙값 최빈값 및 인용액 분포
유형별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별, 매체유형별,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결과
손해배상 인용 사유	구체적 인용사유 명시
손해배상 기각 사유	일반적 유형(위법성 부인, 사실적시 인정, 공공의 이익 등) 명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청구액과 인용액을 분석할 때, 소수의 이례적 최고액 또는 최저액 사건이 평균값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평균값 외에 중앙값과 최빈값을 함께 산출했다.

원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사건 전체의 총 청구액과 총 인용액을 합산하여 분석하고, 피고가 다수인 경우에는 피고를 매체별로 구분한 뒤, 매체별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분석했다. 피고가 언론인인 경우는 해당 언론인이 소속된 매체의 청구액·인용액에, 언론인 개인에 대한 청구액을 합산하여 금액을 산출하였다. 제4장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분석은 각 확정판결에 대해 매체별로 세분화하여 입력한 데이터(419건)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데이터 왜곡을 줄임으로써, 보다 정확한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6) 중앙값이란 사례를 순위대로 배열하여 사례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한 가운데에 위치한 사례의 액수를, 짝수인 경우에는 한가운데 위치한 두개 값의 평균을 말한다.

7) 최빈값은 전체 사례 중 건수가 가장 많은 값이다.

1. 손해배상청구 사건 소송 결과

최근 3년간 명예훼손 언론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가 전체의 84%, 승소율 31.8%

최근 3년간 명예훼손 언론소송 사건에서 손해배상청구의 승소율은 평균 31.8%로, 법원이 전체 청구 중 약 3건당 1건만 인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2년 30.1%, 2023년 31.4%, 2024년 34.3%로 승소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원고의 피해구제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 매체별 확정판결 419건 중 손해배상청구 건수는 352건(약 84%)에 달해, 손해배상이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주요 구제수단임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표 4-1〉 최근 3년간 손해배상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전체청구건	손배청구건	원고 승소	원고 승소율(%)
2022	137	113	34	30.1
2023	162	137	43	31.4
2024	120	102	35	34.3
합 계	419	352	112	31.8

2. 청구액

손해배상 청구액 평균적으로 꾸준히 상승했지만, 중앙값과 최빈값은 훨씬 낮아 원고가 현실적인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

〈표 4-2〉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평균적으로 꾸준히 상승하여 2022년 8,250만 원, 2023년 8,480만 원, 2024년 9,660만 원을 기록했다. 이는 원고들이 해마다 더욱 높은 금액을 청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중앙값은 2022년 3,000만 100원, 2023년 3,100만 원, 2024년 3,000만 원으로, 평균액과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이는 일부 고액 청구가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로, 실제로는 대다수 사건의 청구액이 평균보다 훨씬 낮은 분포를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빈값 또한 2022년 1억 원, 2023년 5,000만 원, 2024년 1,000만 원 등으로 최근 들어 다수 사건의 청구액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원고들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비교적 현실적인 금액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최저액과 최고액 역시 매년 다양한 수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나, 최고액은 3년 내내 10억 원 안팎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표 4-2〉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단위: 원)

연도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값	최저액	최고액
2022	113	82,500,003	30,000,100	100,000,000	2,500,000	1,000,000,000
2023	137	84,805,850	31,000,000	50,000,000	500,000	1,007,000,000
2024	102	96,639,801	30,000,000	10,000,000	5,000,000	1,000,000,000
합 계	352	87,494,777	30,000,100	10,000,000	500,000	1,007,000,000

※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러한 통계는 최근 손해배상 청구액이 전체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실제 다수 사건의 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집중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즉, 소수의 고액 청구가 전체 평균을 크게 높이는 구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원고들이 현실적이고 표준적인 규모로 피해구제를 청구하는 경향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

3. 인용액

매체별 손해배상 평균 인용액 약 854만 원, 인용 최고액 5천만 원

최근 3년간 명예훼손 언론소송에서의 손해배상 인용액은 평균 593만 원(2022년)에서 855만 원(2023년), 1,021만 원(2024년)으로 해마다 뚜렷하게 상승해, 사법부의 인용액 기준이 꾸준히 상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앙값 역시 285만 원에서 300만 원, 500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높아지며, 법원이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인용 규모 자체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최빈값은 2022년 100만 원, 2023년 300만 원, 2024년 1,000만 원 등으로 변화폭이 크지만, 최근에는 1,000만 원대 인용액 판결이 증가했다.

최저 인용액은 2022~2023년 50만 원, 2024년 100만 원으로 저액 판결도 여전히 일부 존재하나, 최고액은 3년 모두 3,9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표 4-3〉 최근 3년간 손해배상 인용액 현황

(단위: 원)

연도	건수	평균액	중앙값	최빈값	최저액	최고액
2022	34	5,932,353	2,850,000	1,000,000	500,000	39,000,000
2023	43	8,551,112	3,000,000	3,000,000	500,000	50,000,000
2024	35	10,214,286	5,000,000	10,000,000	1,000,000	50,000,000
합 계	112	8,275,873	3,500,000	3,000,000	500,000	50,000,000

※ 소수점 첫 번째 자리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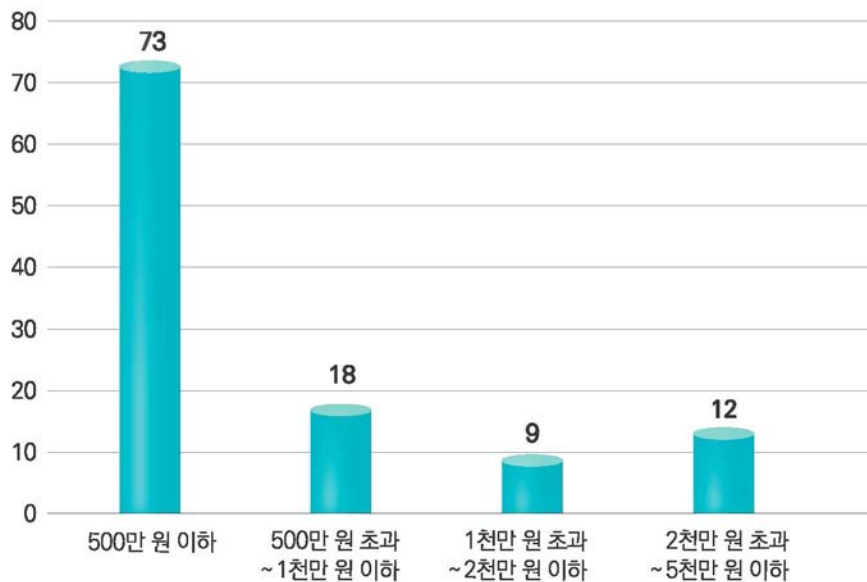
이러한 분석 결과는 손해배상 인용액의 전반적 상승과 함께 소액 판결의 비중이 줄고, 실질적 피해구제 사례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과거의 일부 고액 인용 판결이 평균값을 왜곡하던 경향이 줄어들고, 인용액의 금액 수준이 전체적으로 상향하는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4.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 500만 원 이하 65.2%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된 판결 112건 중 500만 원 이하가 73건(65.2%)으로 가장 많았으며, 500만 원 초과 1천만 원 이하가 18건(16.1%),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가 9건(8.0%),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12건(10.7%)으로 집계되었다. 인용 최고액은 5천만 원이었고, 대부분의 판결에서 소액(500만 원 이하)의 인용이 이루어졌다.

〈표 4-4〉 손해배상 인용액 분포



손해배상 인용액	건수	비율
500만 원 이하	73	65.2
500만 원 초과 ~ 1천만 원 이하	18	16.1
1천만 원 초과 ~ 2천만 원 이하	9	8.0
2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	12	10.7
합 계	112	100.0

5. 원고유형별 손해배상 승소율 및 인용액

일반인 손해배상 승소율 가장 높고, 공적인물 인용액 높아

원고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전체 승소율은 32%로, 유형별 편차는 있으나 대부분 20~40% 사이에 분포한다. 개인 원고 중에서는 일반인의 승소율이 39.4%로 가장 높고, 공적 인물은 28.3%로 낮은 편이다. 단체 원고는 공공단체(40.0%), 기업체(28.2%), 기타 일반단체(31.3%), 종교단체(18.2%) 순으로 나타났다.

단체 원고의 경우(특히 기업체·종교단체) 인용액 평균값과 중앙값이 개인보다 대체로 높으며, 종교단체는 평균과 중앙값이 모두 1,850만 원으로 고액 판결이 가능하지만 사례 수는 적다. 개인 원고 중 공적 인물의 인용액 평균·중앙값은 일반인보다 높아, 사회적 지위가 배상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확인된다. 전체 평균 인용액은 약 1,016만 원, 중앙값은 약 525만 원으로, 소수의 고액 판결이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는 구조임을 보여준다.

〈표 4-5〉 원고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승소율 및 인용액

원고유형		손배청구건수	인용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개인	일반인	109	43	39.4	7,502,223	5,000,000
	공적 인물	53	15	28.3	12,033,333	10,000,000
단체	언론사	6
	국가기관	1	1	100.0	1,000,000	1,000,000
	지방자치단체	2
	기업체	39	11	28.2	17,636,364	10,000,000
	공공단체	5	2	40.0	4,750,000	4,750,000
	종교단체	11	2	18.2	18,500,000	18,500,000
	시민단체	3
	교육기관	2
	기타 일반단체	16	5	31.3	12,200,000	6,000,000
합 계		247	79	32.0	10,163,723	5,250,000

〈표 4-6〉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승소율 및 인용액

공적 인물 유형	손배청구건수	인용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앙값(원)
정치인	22	6	27.3	10,000,000	10,000,000
고위공직자	17	6	35.3	9,833,333	10,000,000
유명 언론인	4	1	25.0	1,500,000	1,500,000
유명 기업인	1
유명 연예인	2
유명 예술·체육인	1
기타 유명인	6	2	33.3	30,000,000	30,000,000
합 계	53	15	28.3	12,033,333	10,000,000

공적 인물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승소율은 28.3%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적 인물의 공적 활동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은 그 제한이 더 완화되어야 한다는 기존 판례와 그 궤를 같이한다. 다만, 고위공직자 그룹은 승소율이 35.3%로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표본 규모가 작아 통계적 의미는 제한적이다. 인용액의 평균과 중앙값 차이는 크지 않지만, 기타 유명인 사례가 평균값을 높인 영향이 있어 실제로는 대부분 1천만 원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유명 기업인, 유명 연예인, 유명 예술·체육인 그룹은 승소 사례가 없어 통계적 해석이 어렵다. 전반적으로 각 그룹의 표본 수가 적어 평균 및 승소율 해석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용액은 사건의 특수성, 피해 정도, 인물의 사회적 영향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6. 매체유형별 손해배상 승소율 및 인용액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인용액은 대부분 300만~400만 원대에 집중

〈표 4-7〉의 분석 결과, 매체 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전체 승소율은 약 32%로 확인되었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가 전 매체 유형에 걸쳐 쉽게 인용되지 않는 경향을 시사한다. 인용액의 평균값은 약 827만 원, 중앙값은 350만 원으로, 양자 간의 차이는 일부 고액 판결(특히 방송, 뉴스통신사)의 영향으로 평균값이 상승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편향을 고려할 때, 실제 인용액은 대부분 300만 원에서 400만 원 범위에 집중되며, 중앙값이 보다 대표적인 지표로 평가된다.

세부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문(일간·주간)의 승소율은 각각 14~19% 수준에 불과하며, 승소 시 평균 인용액 역시 200만 원대에서 600만 원대 수준에 머물렀다. 방송은 평균 인용액이 상대적으로 높으나(2,300만 원), 승소율이 13.6%로 낮다는 점을 볼 때, 고액 청구 사건이 집중되면서 인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인터넷신문의 전체 승소율은 37.1%로 타 매체유형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7〉 매체유형별 손해배상청구 사건 원고 승소율 및 인용액

매체유형		건수	원고승	승소율(%)	인용액 평균값(원)	인용액 중간값(원)
신문	일간	35	5	14.3	6,800,000	4,000,000
	주간	26	5	19.2	2,800,000	1,500,000
	불명	6	2	33.3	4,500,000	4,500,000
방송		59	8	13.6	23,000,000	25,000,000
잡지		3	1	33.3	1,500,000	1,500,000
뉴스통신		4	2	50.0	14,000,000	14,000,000
인터넷신문	독립형	69	34	49.3	10,611,765	6,000,000
	언론사닷컴	108	30	27.8	7,153,260	4,000,000
	불명*	28	12	42.9	5,291,667	3,000,000
불명**		14	13	92.9	1,346,154	1,000,000
합 계		352	112	31.8	8,275,873	3,500,000

* 판결문 상 원고 매체유형은 인터넷신문이지만, 세부 유형(독립형 또는 언론사닷컴)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 판결문 상 원고 매체유형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7. 언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결과

언론인이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확률 60.6%, 연도별 변동 폭이 커

매체별 손해배상청구 353건(〈표4-7〉 참조) 중, 언론인(대표, 편집국장, 담당기자 등)을 단독 피고로 하거나 공동 피고로 포함한 사건은 총 170건으로 전체의 52.1%를 차지한다. 이 중 손해배상 인정 건수는 67건(39.4%), 면책 건수는 103건(60.6%)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23년 인정률이 2022년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가, 2024년에는 약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면책률은 2022~2023년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4년에는 처음으로 50% 미만으로 떨어졌다.

전체적으로 언론인 대상 손해배상청구의 다수(60.6%)가 법적 책임을 인정받지 않고 면책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법원이 언론인의 보도 행위에 대해 폭넓은 책임 면제를 인정하는 현실을 반영한다. 다만, 연도별 인정률의 변동 폭이 큰 점은 사회·정치적 이슈, 판례 경향 등 외부 요인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2024년 인정률과 면책률이 모두 50%대에 근접한 것은 판례 경향 변화 또는 사건 성격의 다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 평균 승소율(인정률)은 39.4%로 나타났다.

〈표 4-8〉 언론인 상대 손해배상청구 결과

연도	총 손해건수	손배 책임 인정	손배 면책
2022	55	21	34
2023	54	15	39
2024	61	31	30
합 계	170	67	103

8.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유

손해배상청구에서 상위 5개 복합 인용 사유가 전체의 69.6% 차지

2022~2024년 매체별로 분류한 손해배상청구 352건 중 인용된 112건을 대상으로 인용 사유를 분석하면, 상위 5개 사유가 전체의 64.3%를 차지한다.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사회적 평가 저하/공익 인정/허위보도/상당성 부정(16.1%), 사회적 평가 저하(14.3%), 허위보도(14.3%), 허위보도/상당성 부정(10.7%), 사회적 평가 저하/허위보도/상당성 부정(8.9%)로 나타난다. 주로 복합적 인용 사유의 빈도와 비율이 높는데, 이는 법원이 인용 판단 시 단일 원인보다는 구체적 사정의 중첩성을 중시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외에도 허위보도, 사회적 평가 저하, 상당성 부정, 공익 인정/부정 등이 결합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기타 사유는 전체의 4.5%로, 다양한 개별적 상황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표 4-9〉 손해배상청구 인용 사유

인용 사유	건수	비율(%)
사회적 평가 저하/공익 인정/허위보도/상당성 부정	18	16.1
사회적 평가 저하	16	14.3
허위보도	16	14.3
허위보도/상당성 부정	12	10.7
사회적 평가 저하/허위보도/상당성 부정	10	8.9
공익 인정/허위보도/상당성 부정	9	8.0
사회적 평가 저하/상당성 부정	5	4.5
공익 부정/허위보도/상당성 부정	4	3.6
상당성 부정	3	2.7
공익 부정/상당성 부정	2	1.8
공익 부정/허위보도	2	1.8
상당성 부정/기타	2	1.8
공익 부정/기타	1	0.9
공익 인정	1	0.9
공익 인정/상당성 부정/기타	1	0.9
공익 인정/허위보도	1	0.9
사회적 평가 저하/공익 부정	1	0.9

인용 사유	건수	비율(%)
사회적 평가 저하/공익 부정/허위보도/상당성 부정	1	0.9
사회적 평가 저하/공익 인정	1	0.9
사회적 평가 저하/공익 인정/상당성 부정	1	0.9
기타	5	4.5
합 계	112	100.0

9.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공익성, 진실성 및 진실상당성 인정이 기각 사유의 과반 이상 차지

2022~2024년 매체별로 분류한 손해배상청구 352건 중 기각된 240건을 분석한 결과, 상위 3개 기각 사유인 공익성/진실성/상당성(24.6%), 진실성(19.6%), 공익성/진실성(12.9%)이 전체의 57.1%를 차지하였다.

다수의 기각 사유는 단일 원인보다는 공익성/진실성, 진실성/상당성 등 복수 요인의 결합 형태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5.8%), '사실적시 없음'(5.0%) 등 명예훼손 요건 자체를 부인하는 사유도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공익성/진실성/상당성이 결합된 사유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해, 법원이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할 때 단일 기준보다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요건 심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표 4-10〉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공익성/진실성/상당성	59	24.6
진실성	47	19.6
공익성/진실성	31	12.9
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	14	5.8
공익성/상당성	13	5.4
사실적시 없음	12	5.0
사실적시 없음/공익성/진실성	8	3.3
사실적시 없음/진실성	8	3.3
공익성	6	2.5
사실적시 없음/공익성	4	1.7
사실적시 없음/공익성/진실성/상당성	4	1.7
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공익성/진실성/상당성	4	1.7
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진실성	3	1.3
당사자 불특정/사실적시 없음/진실성	2	0.8
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공익성/상당성	2	0.8
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공익성/진실성	2	0.8
상당성	2	0.8

기각 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기타	2	0.8
당사자 불특정/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공익성/진실성	2	0.8
당사자 불특정/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	1	0.4
사실적시 없음/기타	1	0.4
사실적시 없음/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공익성	1	0.4
사실적시 없음/사회적 평가 저하 없음/공익성/진실성/상당성	1	0.4
사실적시 없음/진실성/상당성	1	0.4
기타	10	4.2
합 계	240	100.0

제5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 기사삭제 사건

1. 정정보도 및 병합청구 사건 소송 결과

손해배상 · 기사삭제 · 반론보도 등 복합청구가 79.3%

정정보도청구만 한 경우는 10.8%에 불과

제5장 정정 · 반론 · 추후보도청구 및 기사삭제 사건의 분석도 제4장과 마찬가지로, 각 확정판결에 대해 매체별로 세분화하여 입력한 데이터(419건)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손해배상 · 기사삭제 등 금전적 또는 실질적 권리구제 수단이 정정보도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복합청구(병합청구)는 전체의 79.3%를 차지한다. 단일 청구인 정정보도만은 전체의 10.8%에 불과해, 보도 정정과 함께 금전적 구제를 병행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정정보도를 청구한 전체 213건 중 손해배상청구가 결합된 사건은 166건⁸⁾(77.9%)이고, 이 중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병합 청구한 사례가 53.1%로 압도적으로 많다. 금전 청구 없이 정정보도만(23건, 10.8%) 청구하거나 정정보도 · 반론보도만(24건, 11.3%) 청구한 사건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기사삭제와 병합된 유형(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등)은 20건(9.4%)이며 반론보도 포함 병합청구는 61건⁹⁾(28.6%)으로 나타났다. 기사삭제, 반론보도 등 권리구제 수단의 병합은 피해구제 방식이 지속적으로 다양화 · 복합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8) 정정보도/손해배상(113건)+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33건)+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16건)+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4건) = 166건

9)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33건)+정정보도/반론보도(24건)+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4건)=61건

〈표 5-1〉 정정보도 및 병합청구 현황

구분	건수	비율(%)
정정보도/손해배상	113	53.1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33	15.5
정정보도/반론보도	24	11.3
정정보도	23	10.8
정정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16	7.5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4	1.9
합 계	213	100.0

〈표 5-2〉 최근 3년간 정정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전체 청구건수	정정보도 청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2022	137	68	17	25.0
2023	162	87	18	20.7
2024	120	58	14	24.1
합 계	419	213	49	23.0

〈표 5-2〉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정정보도청구의 원고 승소율은 평균 23.0%로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체 소송의 약 4분의 1만 법원에서 인용됨을 의미하며, 정정보도 인용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연도별로는 2023년에 승소율이 20.7%로 하락했다가 2024년 24.1%로 소폭 상승하는 등 비교적 일관된 수준에서 소규모 변동이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사건 특성이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일시적인 등락이 발생할 수 있으나, 판례나 외적 요인에 의한 급격한 변화는 드물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정정보도청구는 전체 청구건수(419건)의 약 절반(50.8%, 213건)을 차지하며 손해배상청구와 함께 주요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실제 인용률은 낮은 편이다.

2.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정정보도청구 사건의 주된 기각 사유는 ‘보도의 진실성’

정정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 패소(기각) 사례 163건¹⁰⁾을 분석한 결과, 보도의 ‘진실성’ 인정을 이유로 기각된 사건이 94건(5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실적 주장 아님’이 17건(10.4%), ‘사실적 주장 아님/진실성’이 16건(9.8%)을 차지해, 상위 3개 사유가 전체의 77.9%를 구성하였다.

또한, 복합 사유(예: ‘사실적 주장 아님/진실성’, ‘지엽말단/진실성’, ‘진실성/위법성 조각’)는 30건(18.4%)으로, 법원이 기각 판단 시 단일 기준뿐 아니라 복수의 판단 요소를 중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정정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진실성	94	57.7
사실적 주장 아님	17	10.4
사실적 주장 아님/진실성	16	9.8
지엽말단/진실성	8	4.9
진실성/위법성 조각	6	3.7
개별적 연관성 부정/진실성	5	3.1
개별적 연관성 부정	3	1.8
위법성 조각	3	1.8
개별적 연관성 부정/지엽말단/진실성	2	1.2
지엽말단/정정보도문이 원보도와 관련없음/진실성	2	1.2
사실적 주장 아님/지엽말단	1	0.6
정정보도문이 원보도와 같음	1	0.6
지엽말단	1	0.6
기 타	4	2.5
합 계	163	100.0

10) 〈표 5-2〉 최근 3년간 정정보도청구 원고 승소율(매체별) 자료에 따르면, 정정보도청구 총 건수에서 인용 49건을 제외하면 164건이나, 이 중 각하 사건 1건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 기각 건수는 163건이다.

3. 반론보도 및 병합청구 사건 소송 결과

반론보도청구는 정정보도·손해배상 등과 복합청구 많아

〈표 5-4〉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반론보도 및 병합청구 소송(82건) 중 76.8%(63건)는 정정보도, 손해배상 등과 결합된 복합청구 형태로 이루어져, 복수의 권리구제 수단을 병합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론보도만(19건, 23.2%) 또는 정정보도/반론보도(24건, 29.3%) 등 보도계재만을 구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어, 실제 피해구제 실무에서는 금전적 배상과 명예회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청구가 중심축을 이룬다.

손해배상과 결합된 반론보도 청구도 39건¹¹⁾(47.6%)에 달해, 전체 반론보도 소송 중 절반 가량이 금전적 피해구제를 포함한다. 기사삭제까지 병합해 다양한 권리구제 방안을 함께 제기하는 사례는 드물지만 꾸준히 존재한다. 이는 원고가 경제적 배상과 명예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를 병행하여 청구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표 5-4〉 반론보도 및 병합청구 현황

구분	건수	비율(%)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	33	40.2
정정보도/반론보도	24	29.3
반론보도	19	23.2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	4	4.9
반론보도/손해배상	2	2.4
합 계	82	100.0

〈표 5-5〉에 따르면, 전체 사건 중 반론보도청구는 82건(19.6%)으로, 정정보도청구에 비해 비중이 낮다. 최근 3년간 반론보도청구 건수는 매년 22~36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반론보도청구 사건에서 원고 승소율은 2022년 25.0% → 2023년 38.9% → 2024년 50.0%로 매년 꾸준히 상승했으며, 3년 평균은 37.8%로 정정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평균(23.0%)보다 높다. 이는 법원이 반론보도청구에 대해 비교적 완화되고 포용적인 인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11) 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33건)+정정보도/반론보도/손해배상/기사삭제(4건)+반론보도/손해배상(2건)=39건

〈표 5-5〉 최근 3년간 반론보도청구 원고 승소율

연도	전체 청구건수	반론보도 청구건수	원고 승소	승소율(%)
2022	137	24	6	25.0
2023	162	36	14	38.9
2024	120	22	11	50.0
합 계	419	82	31	37.8

4.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반론보도청구 기각사유는 지엽말단과 사실적 주장성 결여가 많아

반론보도청구 사건 중 원고 패소(기각) 사례 51건을 분석한 결과, ‘지엽말단’이 단독 사유로 19.6%를 차지했다. 이는 원고가 요구하는 반론보도가 원문 기사에 보도된 내용의 핵심과 무관하고 사소한 것에만 관련되어 있어 공정한 여론 형성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사실적 주장 아님’(13.7%)과 사실적 주장성 결여가 결합된 사유도 주요 비중을 차지해, 반론보도 대상이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논평, 혹은 추정 보도일 경우 기각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이와 함께 반론보도문 및 원보도 관련성에 관한 사유(반론보도문이 사실에 반함, 원보도와 동일·무관 등)도 3.9~9.8% 범위에서 꾸준히 나타나, 법원이 판단 시 반론의 내용과 원보도와의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6〉 반론보도청구 기각 사유

기각 사유	건수	비율(%)
지엽말단	10	19.6
사실적 주장 아님	7	13.7
지엽말단/반론보도문이 사실에 반함	6	11.8
반론보도문이 사실에 반함	5	9.8
개별적 연관성 부정/반론보도문이 사실에 반함	2	3.9
반론보도문이 원보도와 같음	2	3.9
반론보도문이 원보도와 관련 없음	2	3.9
사실적 주장 아님/기타	2	3.9
사실적 주장 아님/지엽말단/반론보도문이 원보도와 같음	2	3.9
사실적 주장 아님/지엽말단/반론보도문이 원보도와 관련 없음	2	3.9
사실적 주장 아님/지엽말단	1	2.0
기타	10	19.6
합 계	51	100.0

분석 판결 목록(502건)

※ 동일사건순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	2020가합598794	2022-01-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	2021가단5057939	2022-01-1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3	2022나6217	2022-07-19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4	2022다265031	2022-11-17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5	2020가합1924	2021-07-0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6	2021나2027421	2022-01-14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7	2020가합101288	2020-12-1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8	2021나2002804	2022-01-1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9	2022다215913	2022-06-24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10	2019가합652	2020-12-11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1	2021나2004299	2022-01-14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12	2020가단5073576	2021-01-15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3	2021나11373	2022-01-19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14	2022다215234	2022-05-26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15	2019가합105611	2022-01-2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6	2020가합117474	2022-01-20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7	2020가단5282172	2022-01-2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8	2022나7272	2022-10-14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19	2021가합31842	2022-01-21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0	2022나2007318	2023-03-1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21	2023다227531	2023-06-16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22	2020가단5210238	2022-01-2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3	2022나6934	2023-02-14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24	2023다223379	2023-06-17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25	2019가합39720	2020-11-25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26	2020나2047923	2022-01-2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27	20220다215876	2022-05-26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28	2021가단206038	2022-01-25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29	2020가합42883	2022-01-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기각
30	2022나2007295	2023-02-16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31	2021가합102103	2022-01-27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기각
32	2020가단123340	2022-02-09	인천지법 부천지원	1심	손배	기각
33	2020가합596897	2021-06-0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34	2021나2022457	2022-02-11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35	2022다222836	2022-06-17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36	2018가합40419	2019-11-27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7	2020나2000153	2022-02-24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38	2019가단249100	2022-03-18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39	2022나42416	2024-01-19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기각
40	2021가단220726	2022-03-24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41	2021가합774 2021가합781(병합)	2022-03-31	대구지법	1심	반론	인용
42	2021가단200345	2022-04-05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43	2022나56041	2022-11-25	서울남부지법	2심	손배	기각
44	2018가합587562	2021-09-08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45	2021나2035620	2022-04-0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46	2022다231168	2022-08-11	대법원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47	2020가합490	2021-04-0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인용
48	2021나2014883	2022-04-08	서울고법	2심	정정	인용
49	2022다231151	2022-07-18	대법원	3심	정정	인용
50	2020가합111186	2021-09-30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51	2021나2039912	2022-04-08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52	2020가합117603	2022-04-14	서울남부지법	1심	추후/손배	인용
53	2020가합109022	2021-11-04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54	2021나2047715	2022-04-1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55	2021가소30864	2021-06-24	수원지법 안산지원 광명시법원	1심	손배	인용
56	2021나79650	2022-04-20	수원지법	2심	손배	인용
57	2022다233225	2022-12-16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58	2020가합35083	2021-08-1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기각
59	2021나2040158	2022-04-22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60	2022다233362	2022-08-22	대법원	3심	정정	기각
61	2020가단5290081	2022-04-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62	2022나23977	2022-09-23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63	2020가합12612	2022-04-27	청주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64	2021가단92734	2022-04-28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손배	기각
65	2021가합30146	2021-08-20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66	2021나2037428	2022-04-2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67	2020가합588353	2022-04-2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68	2020가단57180	2022-05-11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손배	인용
69	2019가단124533	2022-05-18	대전지법	1심	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70	2021가단125	2022-05-18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71	2021가합519460	2022-05-2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72	2021가합562648	2022-05-2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73	2019가합39720	2020-11-25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74	2020나2047923	2022-01-2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75	2022다215876	2022-05-26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76	2021가합794	2022-05-27	서울서부지법	1심	반론	기각
77	2019가합37885	2021-08-13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기타	기각
78	2021나2032119	2022-06-08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기타	기각
79	2022다251650	2024-10-08	대법원	3심	손배/기사삭제/기타	기각
80	2020가합66922	2022-06-09	인천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81	2018가단258363	2021-04-21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82	2021나59253	2022-06-15	인천지법	2심	손배	기각
83	2022다254345	2022-10-16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84	2021가합3186	2021-08-11	광주지법 해남지원	1심	정정/손배	인용
85	2021나23833	2022-06-22	광주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86	2021가단248960	2022-07-01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87	2020가합108527	2021-12-01	대전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88	2022나10048	2022-07-06	대전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89	2019가단79035	2021-04-09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1심	손배	기각
90	2021나207237	2022-07-07	의정부지법	2심	정정/손배	기각
91	2022다259180	2022-11-10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92	2021가합40211	2022-07-08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93	2022가합32897	2022-07-08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94	2021가단56932	2022-07-08	제주지법	1심	손배	기각
95	2020가합37348	2021-10-2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96	2021나2046255	2022-07-0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97	2021가합42460	2022-07-08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98	2022나2029165	2023-06-23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99	2023다254861	2023-11-03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100	2020가합111957	2022-07-14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01	2022나2032352	2022-12-1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02	2019가합569431	2022-07-15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03	2019가합569516	2021-04-1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04	2021나2016063	2022-07-15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105	2022다265369	2022-11-18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106	2020가합536000	2021-04-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07	2021나2016346	2022-07-1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08	2022다263639	2022-10-14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109	2020가합113717	2021-10-28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110	2021나2043980, 2021나2043997(병합)	2022-07-15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111	2022다260906	2022-11-18	대법원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112	2020가소1827676	2021-02-2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13	2021나13768	2022-07-20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114	2018가합572188	2022-07-2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15	2022나2033065	2023-04-28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116	2022가단204343	2022-07-20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17	2022나46029	2023-02-03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기각
118	2023다216982	2023-05-03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119	2021가합233	2022-07-21	인천지법	1심	정정	기각
120	2021가합551464	2022-07-2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1	2022나2031953	2023-03-3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122	2019가합106072	2022-01-2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23	2022나2007370	2022-07-2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24	2022다265956	2022-12-20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125	2020가합1499	2022-08-04	인천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26	2020가합42746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7	2021가합35424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8	2021가합725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29	2020가합105051	2022-08-18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	기각
130	2021가합33831	2021-12-17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기각
131	2022나2002788	2022-08-19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132	2021가단5121472	2022-08-1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33	2022나53183	2023-05-30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134	2021가단5129414	2022-08-1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35	2021가합503717	2022-08-2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36	2021가단220257	2021-10-08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137	2021나69682	2022-08-25	서울남부지법	2심	손배	인용
138	2021가합547	2022-08-25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39	2022가합31627	2022-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140	2020가합32886/ 2020가합32893(병합)	2022-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41	2022나2037838/ 2022나2037845(병합)	2023-06-0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142	2023다254786	2023-10-12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43	2021가합107993	2022-09-01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기각
144	2021가합428	2022-09-0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145	2021가합35660	2022-09-0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146	2022가합241	2022-09-0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47	2019가합526984(본소)/ 2022가합516628(반소)	2022-09-0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48	2021가단5122666	2022-09-0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49	2022나56281	2023-09-06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150	2021가합10437	2022-09-15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정정/반론	인용
151	2021가합653	2022-09-15	인천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52	2021가소423879	2022-09-21	서울북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53	2022나41639	2023-08-16	서울북부지법	2심	손배	기각
154	2020가합100882	2021-07-22	대전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55	2021나14203	2022-09-22	대전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156	2020가합108043	2022-09-22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기사삭제	기각
157	2022나2043574	2023-11-24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기각
158	2019가단531160	2022-09-28	광주지법	1심	손배	기각
159	2021가합542842	2022-09-28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160	2020가합579908	2021-12-0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61	2021나2050773	2022-09-3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162	2021가합101	2021-12-02	서울북부지법	1심	반론	기각
163	2022나2001105	2022-09-30	서울고법	2심	반론	기각
164	2021가단5317952	2022-10-0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65	2021가단3143	2022-10-12	수원지법 성남지원	1심	손배	기각
166	2022나93851	2023-06-15	수원지법	2심	손배	기각
167	2023다254106	2023-09-05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168	2022가합100838	2022-10-13	서울남부지법	1심	기사삭제	인용
169	2021가단5122512	2022-10-1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70	2021가합560918	2022-10-1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71	2021가합26386	2022-10-19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172	2021가합30767	2022-10-25	춘천지법 강릉지원	1심	반론/손배	기각
173	2022나2549	2023-06-23	서울고법(춘천)	2심	반론/손배	인용
174	2020가합580304	2022-04-1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75	2022나2016626	2022-11-03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176	2021가단132414	2022-11-04	서울북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77	2022나43062	2023-10-13	서울북부지법	2심	손배	기각
178	2021가합53118	2022-11-10	창원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179	2020가소1461984	2020-11-1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180	2020나83814	2022-11-11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181	2022다299034	2023-03-30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182	2020가합5452	2021-11-1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	기각
183	2021나2049476	2022-11-11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인용
184	2020가합7213	2022-05-19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85	(춘천) 2022나949	2022-11-11	서울고법(춘천)	2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86	2019가합563358	2022-11-16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87	2023나2002327	2023-08-17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188	2023다284329	2024-01-19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189	2021가합559529	2022-11-1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90	2022나2051070	2023-11-03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191	2021가합51954	2022-11-17	광주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92	2021가합581243	2022-11-2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193	2021가단208584	2022-11-25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194	2022가합521378	2022-11-3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195	2020가소2463860	2021-06-0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196	2021나40067	2022-11-30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197	2018가합41856	2020-11-11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198	2020나2047381	2022-02-1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199	2022다222898	2022-08-31	대법원	3심	정정/손배	파기
200	2022나2033782	2022-12-08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정정/손배	기각
201	2021가소104017	2021-11-19	대전지법	1심	손배	기각
202	2021나126885	2022-12-14	대전지법	2심	손배	기각
203	2023다205258	2023-04-27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204	2021가합592892	2022-12-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기각
205	2023나2003719	2023-06-16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206	2021가합10860	2023-01-12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정정/손배	인용
207	2023나20555	2023-07-26	광주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208	2022가소346838	2022-08-25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209	2022나47459	2023-01-12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인용
210	2021가합24137	2023-01-12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211	2022가합267	2023-01-12	수원지법 평택지원	1심	정정/손배	기각
212	2020가합553043	2022-01-1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213	2022나2007615	2023-01-13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214	2023다219059	2023-06-15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215	2020가합578868	2022-05-1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16	2022나2019137	2023-01-13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217	2023다209755	2023-04-27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218	2021가합36625	2022-05-1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219	2022나2021574	2023-01-13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220	2023다215897	2023-05-20	대법원	3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221	2022가합32576	2023-01-1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22	2021가단259040	2023-01-18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223	2022가합509712	2023-01-18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224	2021가합59392	2023-01-19	광주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225	2016가합543094	2020-09-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226	2020나2037971	2023-01-2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227	2021가합517907	2022-04-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228	2022나2016633	2023-01-27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229	2023다215903	2023-05-22	대법원	3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230	2022가단5048185	2023-01-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31	2021가단5122345	2023-02-0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32	2023나10121	2023-08-17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233	2022가합532170	2023-02-01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34	2020가합1158	2022-02-11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235	2022나2009765	2022-09-23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236	2022다287246/ 2022다287253	2023-02-02	대법원	3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237	2020가합4817	2021-11-1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인용
238	2021나2050742	2022-09-23	서울고법	2심	정정	인용
239	2022다287260	2023-02-02	대법원	3심	정정	인용
240	2022가합103736	2023-02-02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반론	인용
241	2020가단345212	2023-02-02	부산지법	1심	손배	기각
242	2023나44368	2023-09-15	부산지법	2심	손배	인용
243	2023다298137	2024-01-27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244	2021가합890	2023-02-08	의정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45	2021가합38737	2022-06-0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46	2022나2023280	2023-02-1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247	2021가합1583	2022-07-14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기각
248	2022나2028452	2023-02-10	서울고법	2심	반론	기각
249	2023다224433	2023-06-01	대법원	3심	반론	기각
250	2022가단5015109	2023-02-1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251	2023나11087	2023-12-07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252	2023다317007	2024-04-25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253	2020가합118903	2023-02-16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254	2023나2014122	2024-02-14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255	2024다229930	2024-06-17	대법원	3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256	2021가합42477	2022-06-24	서울서부지법	1심	반론	기각
257	2022나2026654	2023-02-23	서울고법	2심	반론	기각
258	2022가단100239	2023-03-08	대전지법 천안지원	1심	손배	인용
259	2021가합701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추후/손배	인용
260	2022나2034945	2023-04-07	서울고법	2심	추후/손배	인용
261	2023다230285	2023-06-29	대법원	3심	추후/손배	인용
262	2021가합598074	2023-04-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63	2018가합6834	2020-10-2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264	2020나2042720	2022-12-0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265	2023다200376/ 2023다200383(병합)	2023-04-13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266	2021가합535691	2023-04-1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267	2023나2018728	2024-05-31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268	2024다256512	2024-10-10	대법원	3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269	2022가합37298	2023-04-21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70	2023나2018995	2023-09-2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271	2019가합527536	2020-02-1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72	2020나2012620	2023-04-2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273	2021가합732	2022-09-1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274	2022나2039186	2023-04-28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인용
275	2021가합114397	2022-11-1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76	2022나2048364	2023-04-2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277	2023다236627	2023-07-28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278	2021가단261516	2023-04-28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279	2023나44143	2023-10-27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인용
280	2021가합2351	2022-08-3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기각
281	2022나2036118	2023-05-19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282	2021가합31705	2022-08-2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283	2022나2038053	2023-05-19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284	2022가합31146	2022-07-08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85	2022나2029301	2023-06-0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286	2018가합34636	2022-08-1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287	2022나2036729	2023-06-02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288	2021가소44042	2022-08-10	전주지법	1심	손배	인용
289	2022나9487	2023-06-08	전주지법	2심	손배	인용
290	2022가합32293	2023-06-0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291	2021가합2665	2023-06-0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292	2020가합30036	2022-07-20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293	2022나20661	2023-06-09	수원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294	2023다257310	2023-09-22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295	2021가단292498	2023-06-14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296	2023나60634	2023-11-30	서울남부지법	2심	손배	인용
297	2022가합103196	2023-06-15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기각
298	2022가합10201	2023-06-21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299	2020가합575760	2022-08-1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00	2022나2033935	2023-06-2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301	2023다257273	2023-10-16	대법원	3심	정정/손배	인용
302	2020가합42036	2023-06-23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303	2023가단106191	2023-06-23	의정부지법	1심	손배	기각
304	2021가합179	2023-06-28	수원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305	2021가합568370	2023-07-05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306	2021가소2209 2022가소369411	2023-01-10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307	2023나41427(본소)/ 2023나41434(반소)	2023-07-06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인용
308	2023다263063	2023-07-25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309	2019가합40485	2020-08-19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10	2020나2030475	2023-07-07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311	2020가합517788	2022-08-2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12	2022나2036163	2023-07-07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313	2023다266482	2023-12-01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314	2021가합577442	2023-07-0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15	2022가단286018	2023-07-13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316	2023나62524	2024-06-21	서울남부지법	2심	손배	인용
317	2019가합572703	2021-07-0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318	2021나2027667	2022-10-14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319	2022다291320	2023-07-13	대법원	3심	정정/반론/손배	파기
320	2023나2029537	2023-09-08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정정/반론/손배	취하
321	2019가합567565	2020-11-25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322	2020나2048759	2023-07-14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323	2023가합31655	2023-07-14	서울서부지법	1심	반론	인용
324	2022가합50532	2022-03-24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25	2022나11850	2023-07-20	서울고법(인천)	2심	손배	기각
326	2019가합101855	2019-09-19	서울남부지법	1심	반론	인용
327	2019나204447	2020-10-23	서울고법	2심	반론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328	2020다286294	2023-07-27	대법원	3심	반론	기각
329	2022가합100349	2023-08-09	창원지법 마산지원	1심	정정/손배	기각
330	2022가합565934	2023-08-11	서울중앙지법	1심	반론	인용
331	2021가합746	2023-02-15	의정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32	2023나2011925	2023-08-18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333	2022가합33760	2023-01-1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기각
334	2023나2006725	2023-08-18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기각
335	2021가합12370	2023-08-22	창원지법 진주지원	1심	정정/손배	기각
336	2022가합51283	2023-08-24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손배/기타	기각
337	2021가합5736	2023-08-24	전주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38	2022가합561802	2023-08-3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339	2019가합578350	2021-01-2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340	2021나2008505	2023-09-01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341	2022가단268188	2023-09-06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342	2022가합54138	2023-09-07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43	2020가단345212	2023-02-02	부산지법	1심	손배	기각
344	2023나44368	2023-09-15	부산지법	2심	손배	인용
345	2023다298137	2024-01-27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346	2021가단61477	2023-10-11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347	2023나35316	2024-04-23	춘천지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348	2022가단264957	2023-10-12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349	2023나67222	2024-09-13	서울남부지법	2심	손배	기각
350	2023다294194	2024-12-12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351	2021가합549683	2022-11-30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352	2022나2053717	2023-10-13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353	2021가합31354(본소)/ 2022가합34565(반소)	2023-01-27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354	2023나2010014(본소)/ 2023나2010021(반소)	2023-10-13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355	2023다300672	2024-03-15	대법원	3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356	2023가합33873	2023-10-13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357	2021가합39495	2023-02-10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58	2023나2012744	2023-10-2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359	2023다304728	2024-03-14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360	2018가합53541	2023-10-26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361	2019가합64067	2023-10-26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362	2022가단5146225	2023-10-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363	2022가합53681	2023-11-02	광주지법	1심	손배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364	2023가단73	2023-11-08	대구지법 의성지원	1심	손배	기각
365	2023가단66	2023-11-08	대구지법 의성지원	1심	손배	기각
366	2022가합48505	2023-11-08	부산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67	2023가단114606	2023-11-09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손배	기각
368	2023나66450	2024-09-24	부산지법	2심	손배	기각
369	2021가소2395681	2022-11-2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370	2022나73293	2023-11-14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인용
371	2022가합107464	2023-11-16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372	2023가합100132	2023-11-16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	기각
373	2022가단288501	2023-11-21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374	2023가소108969	2023-11-23	창원지법 김해시법원	1심	손배	기각
375	2021가합11896	2023-11-28	창원지법 진주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376	2022가합507174	2023-12-08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77	2023가합45871	2023-12-08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378	2023나2061425	2024-08-23	서울고법	2심	손배	기각
379	2024다290727	2024-11-12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380	2021가단235449	2023-06-16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381	2023나46170	2023-12-14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기각
382	2024다211182	2024-05-17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383	2022가합562966	2023-12-20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384	2023가합32473	2023-12-22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385	2022가합35803	2023-05-12	서울서부지법	1심	반론	인용
386	2023나2023492	2024-01-12	서울고법	2심	반론	인용
387	2024다215207	2024-05-20	대법원	3심	반론	인용
388	2022가합562263	2024-01-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389	2024나2007718	2024-11-26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390	2022가합550994	2023-05-1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기각
391	2023나2022529	2024-01-12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인용
392	2022가합101204	2023-07-12	부산지법 동부지원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393	2023나54979	2024-01-18	부산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394	2022가합103033	2024-01-19	인천지법 부천지원	1심	정정/손배	기각
395	2021가합519194	2023-04-14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96	2023나2018414	2024-01-2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397	2022가합2556/ 2022가합2563(병합)	2024-01-2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인용
398	2022가합552679	2024-01-2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399	2021가합592649	2024-01-3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00	2021가합6521	2022-07-07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손배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401	(춘천) 2022나1430	2024-02-02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402	2022가합104376	2024-02-07	대전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403	2022가합557520	2024-02-0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04	2022가합106980	2024-02-08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405	2021가단244061	2023-01-11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406	2023나41311	2024-02-15	서울서부지법	2심	손배	인용
407	2023가단241920	2024-02-16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기각
408	2024나53756	2024-12-17	서울남부지법	2심	손배	기각
409	2023가단135145	2024-02-22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	인용
410	2022가합536233	2024-03-2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411	2023가합61033	2024-03-2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412	2022가합561208	2024-04-05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413	2024나2018602	2024-11-01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414	2022가합552167	2023-09-27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15	2023나2048743	2024-04-12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416	2022가단5314677	2024-04-19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17	2021가합11764	2023-10-12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418	2023나26348	2024-04-24	광주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인용
419	2022가단227810	2024-05-03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기각
420	2018가합111343	2020-02-11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21	2020나2010686	2021-08-19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인용
422	2021다270654	2024-05-09	대법원	3심	정정/손배	파기
423	2024나2020933	2024-06-11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정정/손배	취하
424	2023가합103186	2024-05-09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425	2024나2026917	2024-12-20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426	2023가합182	2024-05-14	광주지법 목포지원	1심	정정/반론	기각
427	2023가소105398	2024-05-16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28	2024나30887	2024-09-26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429	2024다297568	2024-12-31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430	2022가단5030351	2024-05-2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31	2024나32791	2024-11-28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432	2023가합68683	2024-05-24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433	2022가합11093	2023-08-10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정정	기각
434	2023나16114	2024-05-28	대구고법	2심	정정/반론	인용
435	2022가합10847	2023-08-10	대구지법 포항지원	1심	정정	기각
436	2023나16190	2024-05-28	대구고법	2심	정정/반론	인용
437	2023가합109641	2024-05-30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기사삭제	기각
438	2023가합51531	2024-06-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439	2022가합566470	2024-06-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440	2023가합477	2024-06-14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	인용
441	2021가합12408	2024-06-20	광주지법 순천지원	1심	정정/손배	인용
442	2022가합553085	2023-11-2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443	2023나2059422	2024-06-21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444	2023가합205429	2024-06-27	대구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445	2022가단5174404	2024-06-28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46	2023가단231669	2024-07-03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447	2021가합590643	2023-07-12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인용
448	2023나2034447	2024-07-05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기각
449	2024다266151	2024-11-14	대법원	3심	정정/반론/손배/기사삭제	기각
450	2019가합532002	2020-09-23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	인용
451	2020나2036947	2021-09-03	서울고법	2심	정정/반론	인용
452	2021다276966	2024-07-11	대법원	3심	정정/반론	인용
453	2023가소102849	2023-08-22	부산지법 서부지원	1심	손배	인용
454	2023나61912	2024-07-18	부산지법	2심	손배	인용
455	2024다268232	2024-10-31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456	2023가합71610	2024-07-1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457	2023가합88359	2024-07-1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기각
458	2022가합599	2024-07-25	인천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59	2022가합105109	2023-12-07	서울남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60	2024나2000458	2024-07-26	서울고법	2심	정정/손배	기각
461	2021가합546523	2024-08-14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인용
462	2023가소11633	2024-02-28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1심	손배	인용
463	2024나75436	2024-08-16	광주지법	2심	손배	인용
464	2024다287219	2024-12-12	대법원	3심	손배	인용
465	2021가합508255	2024-08-22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66	2024가합50048	2024-08-22	춘천지법 원주지원	1심	정정	기각
467	2022가합565873	2024-01-31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	기각
468	2024나2010974	2024-08-23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469	2023가소1788550	2023-11-09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70	2023나72228	2024-08-23	서울중앙지법	2심	정정/손배	기각
471	2024다280966	2024-12-15	대법원	3심	정정/손배	기각
472	2023가소105404	2023-12-13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73	2024나3144	2024-08-29	서울중앙지법	2심	손배	기각
474	2024다291553	2024-12-17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475	2023가합203263	2024-09-05	대전지법	1심	정정	기각

번호	판결번호	선고일자	법원명	심급	청구명	결과
476	2022가합22764	2024-09-05	서울북부지법	1심	손배	인용
477	2023가합107461	2024-09-12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478	2023가합36377	2024-09-13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인용
479	2022가단109361	2024-09-26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	기각
480	2023가단70860	2024-09-26	수원지법 평택지원	1심	손배	기각
481	2023가소409527	2023-07-05	인천지법	1심	손배	인용
482	2023나68435	2024-09-26	인천지법	2심	손배	인용
483	2022가단232393	2023-10-13	서울서부지법	1심	손배	인용
484	2023나2055321	2024-09-27	서울고법	2심	손배	인용
485	2019가단17178	2020-12-11	서울북부지법	1심	손배	기각
486	2020나43556	2024-10-10	서울북부지법	2심	손배	기각
487	2024다298950	2024-12-26	대법원	3심	손배	기각
488	2023가합183	2024-05-02	인천지법	1심	정정	기각
489	(인천)2024나13034	2024-10-18	서울고법	2심	정정	기각
490	2024가단209336	2024-10-23	서울남부지법	1심	손배	인용
491	2023가합109617	2024-10-23	서울동부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492	2023가소10807	2023-07-20	수원지법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1심	손배	기각
493	2023나83585	2024-10-23	수원지법	2심	손배	기각
494	2022가합106907	2024-10-24	대전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495	2023가단62326	2024-11-13	전주지법 군산지원	1심	손배	기각
496	2021가합583515	2024-02-0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497	2024나2010905	2024-11-22	서울고법	2심	손배/기사삭제	기각
498	2024가단5243762	2024-11-27	서울중앙지법	1심	손배	기각
499	2023가합37103	2024-12-06	서울서부지법	1심	정정/손배	기각
500	2023가합88342	2024-12-06	서울중앙지법	1심	정정/반론/손배	인용
501	2021가단256848	2023-05-17	인천지법	1심	손배	기각
502	2023나64990	2024-12-13	인천지법	2심	손배	기각